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박윤국 후보에게 드리는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I. 질의 이유

-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는 4·10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께서는 아래 핵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

■ 공무원·교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 정치후원금의 자유 허용 △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허용

※ 본 자료는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 및 26만 공무원·교사 조합원의 후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제출 시한 : 2024. 3. 19(화) 14:00까지

■ 제출 회신 :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FAX> 02-6277-0172
<e-mail> ednhunt1@gmail.com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Phone>

<e-mail> hds1440@korea.kr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II.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질의

<질의 1>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견

(배경 설명)

공무원 임금은 민간대비 83.1%(인사혁신처, 2022)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기본급(177만원)이 최저 임금(201만원)보다 약 24만원이나 적을 정도입니다.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26%(14,341명)가 청년 공무원·교사일 정도(공무원연금공단, 2022)로 공직사회가 위기입니다.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임금을 논의하는 시늉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130만 공무원·교원,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

후보께서는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공무원·교사 간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추진되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당 박스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2>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

(배경 설명)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작년 서이초 사태는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관련 법령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교수, 학원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등 어린이·학생을 상대하는 많은 직종의 분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유·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는 교육감으로 휴직출마(복직도 가능)가 가능한데,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 후보께서는 22대 국회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② 정치후원금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③ 교육감 휴직 출마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④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당 박스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3>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

(배경 설명) 현재 공무원은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 공무원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의견에 단순히 ‘좋아요’ 등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받고 있습니다.
-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이 금지된 것은 물론 정치후원금도 선관위를 통한 간접적 기탁만 허용되고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직접 후원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후원금을 기탁하라는 독려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 (정치참여의 제약) 정치참여를 위한 출마의 경우도 사직, 퇴직 후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질의) 후보께서는 22대 국회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② 정치후원금의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③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 ☐ (동의) ☐ (입장 없음) ☐ (반대)

※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당 박스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